

오피니언

光日春秋

김민영



'고소영'에 이어 때어난 '강부자' 열풍이 분다.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출신이 새 정부와 청와대를 대부분 차지했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고소영 정부'에 이어 땅 많은 '강남부자 내각'이 국민들을 흥분시키고 있다.

로 자녀들과 헤어져 사는 아픔이다. 공통점이 참 많은 분들이다.

'부자가 뭐가 문제인가?' 청와대는 국민들이 흥분하자 이렇게 응수했다. 부를 축적하는 것이 유능함의 표시라 생각하기고 있다.

장관 후보들 대부분이 대한민국 1% 안에 드는 재력가들이다. 자산이 수십억, 수백억이라는 것 말고도 이 분들은 공통점이 많다. 대체로 서울 강남에 모여 살고 부부는 각자 아파트 한 채씩, 혹은 두세 채씩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피스텔과 임대, 농지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그 분들의 주변에는 한결같이 부동산 정보에 밝은 분들이 많은데 이 분들은 대개 선의로 투자를 권유하며 이렇게 투자하면 값이 뛰어나고 본의 아니게 재산이 늘어난다.

또 이 분들은 외제차를 애용하고 값비싼 예술품, 골동품, 귀금속을 사랑하고 이름난 헬스장과 골프장에서 우의를 다진다. 이런 분들도 인생의 회한과 아픔이 있는데 젊은 날 병약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아쉬움과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외국에서 자라 외국국적을 갖게 된 관계

는 이명박 대통령과 새 정부 관계자들의 철학이 깊게 배어 있다.

그렇다. 부자가 문제라 생각하는 국민이 어디 있었는가? 정당한 노력으로 얻은 부는 존경의 대상이지, 경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청와대나 장관 후보들의 언행이 국민적 상식이 나 정서와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것 아닐까 싶다.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할 뿐 투기와 돈을 추구한다", "유방암 검사를 했는데 암이 아니라는 결과를 보고 남편이 기뻐하며 서울 서초동 오피스텔을 사줬다", "부부가 교수 25년 하면서 재산 30억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도 양반 아니냐"는 등 한마디 한마디가 어둠에 남을 만한 언급들이다.

무엇보다 지나치게 많은 땅과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또 사고팔기를 반복한 것이 투기를 통해 불로소득을 얻고자 하는 것 말고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좁은 국토에서 땅과 주택을 투기의 대상,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다보니 서민의 허리를 휘게 만들고 경제의 발목을 잡는 지경에 이르렀다.

부동산투기 망국론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부자가 뭐가 문제냐고?

부동산투기를 막는 것이 사회적 의미며 공동체의 합의일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경제를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 게다가 벌써부터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완화'와 '민간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정책은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새롭게 도입한다는 '지분형 주택' 정책도 주택을 투자의 수단으로 인정하고 지속적인 집값 상승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정책이니 집값이 '서민'보다 더 투자 보유자, 부동산 자산가들에게 훨씬 더 친근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이리다보니 땅부자

내각이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주택정책을 펼치겠느냐는 국민적 의구심이나 거부감이 표출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청와대 대변인은 또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재산이 많다고 자격이 없다고 하면 흑백논리라며 중요한 것은 능력과 국가관'이라 했다. 이 또한 정당한 항변인지 모르겠다. 지금 장관 물망에 오른 분들 상당수가 교수인데 능력이 있는 교수라면 10년간 제대로 된 논문 한번 발표하지 않고, 제자들의 논문을 베꼈다는 의혹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장관 후보의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나 자녀들의 상당수가 국적을 포기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 당혹스럽다.

우리는 역대 총리와 장관들이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논문표절 의혹이나 자녀 국적사비 등 도덕성 문제로 줄줄이 낙마한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를 국민들이 용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왕 물러날 것이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정리되는 것이 여러모로 국익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새 정부가 국민적 불신을 받으며 질풍발정부로 출발하는 것보다는 다소 늦더라도 온전한 장관들로 구성되어 믿음직한 출발을 하는 것이 나은 것 아니겠는가?

(참여연대 사무처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평화도시 로드맵 구체화 서둘러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한다. 아시아문화개발원, 문화대학원 등 핵심사업이 제때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오는 2012년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일정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이 수립됐지만 아직까지 문화전당 건립을 제외한 핵심사업이 전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문화개발원과 문화대학원은 문화전당 착공과 동시에 설립돼야 하지만 올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 상태다.

오는 5월 착공될 문화전당 건립을 위해 전당 건립단과 운영단 등이 구성돼야 하지만 이마저도 새 정부의 인력감축 방침에 따라 제동이 걸렸다. 자칫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문화전당 건물만 세우고 끝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 지금과 같은 사업 진척으로는 문화전당도 당초 일정대로 완공될지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다.

문화중심도시 조성은 지난 2006년 9월 마련된 특별법에 근거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각종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핵심사업의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지난해 조성위원회까지 폐지키로 했다가 지역 여론의 거센 반발로 백지화한 바 있다. 새 정부의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문화중심도시 조성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국책사업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걸맞은 문화인프라 확충을 통한 문화자산을 축적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돼야 하는 이유다.

새 정부는 문화중심도시의 구체적인 시행 로드맵을 서둘러 제시하고 사업시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다.

남주홍·박은경 후보 교체 당연한 조치다

남주홍 통일부장관 후보자와 박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이명박 정부의 초대 내각이 출범도 하기 전에 낙마자가 이준호 여성부장관 후보자를 포함, 3명으로 늘었다. 형식은 자진 사퇴였지만 경질이나 다름없다.

남 후보자와 박 후보자의 사퇴는 제기된 의혹을 감안할 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남 후보자는 이념적 편향성 논란과 함께 가족 이종국적, 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 교육비 이중 공제 등으로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박 후보자는 절대 농지 소유 등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편법 증여 의혹 등이 제기됐다.

청와대가 이들의 사퇴를 받아들인 것은 결과해지 차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기는 하나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는 감수하고 극복해야 될 과제일 것이다. 두 번째 주된 공판제도의 개선이다. 제시된 및 일간지 신문 등 다분히 행정편의적으로 운용되어 많은 주민들의 의견청취가 불가능했던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편의 위주의 공판 방안이 도

출발은 하는 것이 나은 것 아니겠는가? (참여연대 사무처장)

출발은 하는 것이 나은 것 아니겠는가? (참여연대 사무처장)

출발은 하는 것이 나은 것 아니겠는가? (참여연대 사무처장)

기고



심정보

오늘날 도시계획수립 과정에서 주민 참여 문제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민주적인 가치로 대두되고 있다.

그간 전문지식의 부족과 제도상으로 주민참여가 제한돼 왔으나 국민 생활 수준의 향상과 민주화 진전, 지방자치 시대가 정착하면서 이제는 주민들의 성숙하고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도시관리계획 등의 정책 입안은 공공성 추구를 목표로 행정 우월주의적 입장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었다. 물론 불가피한 경우도 있었지만 그 본질적 특성상 주민참여에 한계가 있으며 주민참여 주체, 참여유형, 참

그간 계획초기의 입안단계에서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는 없고 계획의 윤곽이 어느 정도 정해지고 난 뒤에야 주민에게 그 내용이 공개되므로 감정이 많이 있었다고 본다. 이 경우 입안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한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는 감수하고 극복해야 될 과제일 것이다.

두 번째 주된 공판제도의 개선이다. 제시된 및 일간지 신문 등 다분히 행정편의적으로 운용되어 많은 주민들의 의견청취가 불가능했던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편의 위주의 공판 방안이 도

도시계획 주민도 참여해야

여시, 참여방식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현행법상 주민참여 수단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주민제안, 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 지방자치회의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공고 및 공판 등 다양한 형식이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제도의 실효성과 대표성 결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활성화되지 않아 주민들로부터 받는 호응은 인색하다고 본다.

우리 시에서는 합리적인 도시계획행정의 정착과 주민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첫 번째 공청회 개최 확대이다. 도시기본계획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개최시기를 관계법에 구애받지 않고 계획의 발의단계 및 준비단계에서부터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 및 의견수렴을 통해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입되도록 할 계획이다.

세 번째 현행 도시계획위원회는 관련 전문가 뿐 아니라, 공모를 통한 시민 대표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도시계획의 입안과정에서 보다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개진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시민에 의한 도시계획의 사후 평가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계획이다. 이는 도시계획이 집행되면서 발생한 문제를 파악해 향후 계획 수립 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할 방침이다.

최근 주민제안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입안이 종종 출원되고 있으나 대부분 지역주민이 아닌 개발 업체에 의해 마련된 계획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성숙된 민주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도시계획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기대한다. <광주시 도시계획과장>

편리한 내비게이션 '과속 조장'하는 건 아닌지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면 길찾기가 매우 편리하다. 하지만 길 안내 뿐만 아니라 도로 곳곳에 설치된 과속감시 카메라의 위치까지 알려주며 오히려 과속을 조장하는 등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내비게이션은 과속방지 카메라가 나타나기 500m 또는 아예 1~2km 전방에서부터 "전방 0m 지점에서 안전운전 하십시오. 제한속도는 60km입니다"라고 알려준다.

길을 잘 알고 있는 택시기사들도 내비게이션을 장착한 경우가 많다. 이는 대부분은 과속감시 카메라 때문에 달았을 것이다.

결국 내비게이션이 과속 안전 보합이라 되는 것처럼 이를 믿고 과속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또 이동식 카메라 경보음을 듣고 급브레이크를 밟기도 해 뒤따라온 차량과 충돌사고 위험마저 일어나고 있다. 여기에 추돌사고 등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유리 충돌사고 내비게이션은 치명적인 무기로 돌변하기도 한다.

내비게이션이 과속 단속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 오히려 교통사고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자. <최계숙·광주시 남구 원산동>



정신과 의사 김홍식의 LA통신

승례문 화재를 보면서 한국의 관료주의의 병폐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 화재 진화에 있어 가장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두말할 필요없이 현장에서 뛰고 있는 일선 소방관들이다. 따라서 존경을 다투거나 위급한 응급 상황에서의 모든 결정권은 실무자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응급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상부에 보고하고 상급자의 지시를 기다렸다가 실행해야 된다는 어처구니가 없다. 여기에 사후 질책을 염려해 실무자들이 머뭇거리거나 '관료주의의 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다.

미국 대통령에 출마하는 후보마다 부르는 공약이 더 '작은 정부'를 만들것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서 기업하기를 꺼린다. 실제 그 업무와 직접 관련된 사람은 실무자 한 사람 뿐인데도 총총이 뒷사람들의 도장을 받아야 한다.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장관들이 대통령과 함께 취임하고 함께 퇴임한다. 물론 감독 책임이나 기강 확립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그래도 너무 지나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또 미국은 거의 모든 절차가 실무자 한 사람의 선에서 결정된다. 예를 들어 건축 분야에서의 현장 검사와 허가는 현장을 방문한 검사관이 혼자서 다 한다. 그런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잘못된 단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당연히 그 검사관이 모든 책임을 진다.

승례문 화재를 보면서

다는 것이다. 관료주의에 젖어있는 '공무원' 조직에 맡기면 1억 달러를 들여 1년이 걸릴 일을 경쟁 입찰을 시켜 민간 기업이 맡기면 그 절반의 비용과 절반의 기간으로도 해내기 때문에 '작은 정부'를 공약으로 내세운다. 관료주의의 병폐를 가장 많이 느꼈을 기업인이 대통령이 되었다. 이제 한국도 관료주의의 병폐가 많이 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

자신의 집에 불이 났다고 한다면 보고나 계통 따위에 구애없이 자기 자신의 판단으로 그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할 것이다. 이런 당연한 조치를 행정기관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불필요한 규제들 때문일 것이다. 한국에서 사업을 개설하거나 건축을 하려면 층층이 너무나도 많은 도장을 받아야

다. 승례문 화재를 보면서 한국의 관료주의의 병폐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 화재 진화에 있어 가장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두말할 필요없이 현장에서 뛰고 있는 일선 소방관들이다. 따라서 존경을 다투거나 위급한 응급 상황에서의 모든 결정권은 실무자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응급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상부에 보고하고 상급자의 지시를 기다렸다가 실행해야 된다는 어처구니가 없다. 여기에 사후 질책을 염려해 실무자들이 머뭇거리거나 '관료주의의 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다.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장관들이 대통령과 함께 취임하고 함께 퇴임한다. 물론 감독 책임이나 기강 확립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그래도 너무 지나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기업 '평판 면점'은 위험한 발상... 자제해야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었을 때. 같은 직종의 다른 회사의 찾고 있었는데 우연히 신문에서 '경력사원 모집' 구인 광고를 보게 돼 입사 지원 했다.

서류 심사를 거쳐 면접까지 본 뒤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던 어느날이었다. 그만 둔 회사에서 신입에서 근무하는 입사 동기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리고 그에게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내가 응시한 회사 인사 담당자가 그 동기에 전화를 걸어 "거기 000 근무하지 않겠느냐. 그 사람에게 대해 좀 알고 싶다"고 말하더라는 것이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특정인의 신상을 묻는 전화를 받은 입사 동기가 "누군데 왜 그런걸 묻냐"고 되물자 그 쪽에서는 내가 입사지원한 사실을 말하고는 소위 '평판 면점'을 진행중이니 나에 대해서 좀 알려 달라고 요청하더라는 것이다.

개인 신상이기도 하고 또한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함부로 말해줄 수 없어 거절하더라도 손해볼 일은 아닐 듯해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몇가지 알려줬다고 했다.

말을 듣고보니 정보를 알려준 입사 동기가 고맙기는 했지만 회사들의 이 같은 '평판 면점'이 무척 불쾌했다.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한 노력인지 알겠지만 정보를 주는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특정인에 대해 물었을 경우 그 친분관계나 특정인 감정, 개인적인 관계 여부에 따라 얼마든지 악의적으로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판 면점이 그 사람의 인성과 인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이 같은 정보수집 방식은 너무나 위험하고 편협하고 일방적이다. 기업들이 자제해줄 것 바란다. <이성열·나주시 산정동>

Advertisement for Kwangju Ilbo featuring the slogan '無等鼓' and information about the newspaper's subscription and contact details.

Table with subscription information for Kwangju Ilbo, including contact numbers and website details.